



'2013 U-20 World Cup Gwangju' 실사 D-3

## [ 종합·해설 ]

경쟁도시 준비 상황

## 스페인 비고, 친환경 대회 역점 실사 마쳐

'3修 카잔' 대통령 당선자까지 나서  
광주 '시민 열기'로 차별화 유치 총력

광주시와 2013 하계 U-20 월드컵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스페인 비고가 경쟁국 가운데 가장 먼저 국제 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를 마치는 등 '대회 유치전쟁'이 본격 접두했다.

시는 스페인 비고(4월 17~21일)의 실사 동향과 결과를 면밀히 접두하는 한편 강력한 라이벌인 러시아 카잔(5월 15~18일)의 실사준비 상황과 유치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실사를 마친 비고 등의 사례를 토대로 광주의 실사 전략을 최종 점검, 경쟁국 보다 한 차원 높은 완벽

한 실사 준비로 대회 유치를 견인할 방침이다.

스페인 비고에 대한 실사에는 스페인 집행위원회인 스페인 버그를 단장으로 스타브로스 두비스(그리스), 시니사 아스너(세르비아), 케랄 타마(터키), 말름베트 라레스(남아공), 허사토 아카라시(일본) 등 6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참가했다.

이번 실사는 공식 환영행사, 대회 유치역량을 보여주는 프리젠테이션(PT), 경기장, 대학, 속박시설 현장 점검, 실사 마무리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됐다.

27일 FISU 공식 홈페이지([www.fisu.net](http://www.fisu.net)) 뉴스에 따르면 비고는 실사 단 방문 첫날 아벨 카발레오 시장의 공식 환영만찬에 이어 산티아오 도밍구즈 부시장 등의 유치 프로젝트 설명 등 일정을 소화했다.

이 자리에서 산티아오 도밍구즈 부시장은 "U-20 월드컵은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사회를 보다 활기차게 만들 것이고 비고를 도시나 운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대회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비고는 이를 날 진행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실사에서 "U-20 경기장 대부분이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될 것이다"며, 많은 시설들이 신축될 것이다"고 설명한 데 이어 "모든 경기장 시설이 선수촌과 3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당선자의 적극지지와 러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까지 U-20 월드컵에 세 번째 도전하는 카잔은 그동안 유치실패 사례를 교훈삼아 시민들의 유치열기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스페인 비고의 실사 결과를 종합 점검한 결과 가장 중요한 배점항목인 시민들의 유치 열기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고의 실사 결과를 종합·분석해 광주시 유치전략을 점검하는 등 완벽한 실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쇠고기 청문회 못열릴 듯

한나라당 반대...국정조사도 어려워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국회 과반의 석 절유를 기반으로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하긴 했지만 한나라당이 응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차원의 청문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법상 특위위원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도록 되어 있어 한나라당이 불참하면 사실상 특위는 가동되지 못한다.

지난 23일 야3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도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며칠간의 말미를 준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청문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야권이 주진끼로 한 국정조사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특위구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성이 낮다. 한나라당이 끝내 청문회 구성을 거부하면 야권은 어쩔 수 없이 국회 청문회보다 무게감이 덜한 상임위 차원

의 청문회로 변경될 밖에 없다.

하지만 상임위 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큰 차이가 없어 야권의 선택지에서 벗어나 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청문특위 구성이나 국정조사는 어렵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사안을 규명하고 짜증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홍수 사무총장도 "상임위 차원의 특위가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무산시 당내 특위를 구성해 협상과정의 진상규명과 향후 대책 논의를 더욱 체계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28일 오전 국회에서 두 번째 회동을 갖고 청문회와 관련한 향후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문제와 더불어 쟁점화되고 있는 뉴타운 공약 논란 규명을 위한 '뉴타운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 이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축산업 경쟁력 정부대책 촉구...李대통령 축산농가 달래기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의 거의 절반을 소방법 문제점 지적에 할애했다.

전날 축산농가 방문에서 느꼈던 점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축사를 짓는데 소방법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고 하더니, 소방법에 대해서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라며 "소방재경찰(여기) 안 오나.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괜히 거창한 것을 갖고 국회에 서 할 게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소소한 것을 바꿔야 국민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 '화우(和牛, 일본식 밭언·와규)'를 소개하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화우 같은 것은 우리 쇠

고기 값의 10배다. 소 한 마리 가격이 1억원 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도 봐야 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일해 나가면 잠시 이해가 부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흔들려선 안 되고 올바른 자세로 일관되고 신중하게 일해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동욱 기자 tuim@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large rainbow arch with Korean text '2013 월드컵 개최권' (2013 World Cup Host权). Below it, there's a photo of a field with pink flowers and people. Text includes '2013년 6월 11일 ~ 6월 25일 개최' (June 11 ~ June 25, 2013), '경쟁구역 안전면 수준화' (Safety Standardization in Competition Area), and '제3회 전국 청년 대학생 축제' (3rd National Youth and University Student Festival). Contact information: 060-0224.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상철 교수 내정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우여곡절끝에 존속돼 다음 달 새 출발할 예정이지만 신임 위원장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행복도시 현법소원을 주도한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대수도론 주창자가 균형발전 맡는다?

정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경제권 구상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다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다음달 본격 재개동으로 하고, 이달말까지 위원 인선을 비롯한 실무진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임 위원장에는 최상철(68)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생의 최 내정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경기도 규제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04년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지난해 이 대통령 경선 캠프에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지역 학계에서는 최 내정자가 지난 2005년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로서 222명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데다 '분권과 균형'보다는 '규모와 집적의 경제'를 내세워 수도권 육성론을 펴왔다는 점에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한국 선진화의 길'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는 규모와 집적의 경제"를 내세워 수도권 육성론을 펴왔다는 점에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기존 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할 신임 위원으로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자치단체장, 기업인 등을 상대로 인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